극지해소식

No.161
31 May
www.kmi.re.kr

발행인 조정희 원장 **책임** 김엄지 극지전략연구실장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김주형 부연구위원, 김지영 전문연구원,
엄단비 전문연구원, 유지원 연구원, 정다현 연구원, 한다희 연구원
담당자 김엄지 051)797-4776 (umjikim@kmi.re.kr)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 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국제기구 | 북극이사회, '해양 연결성 콘퍼런스' 개최 ····· 2

북극권 국가 정책

캐나다 |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과 북극 안보 협력 강화 ····· 3
캐나다, 핀란드, 미국 | 북극권 국가 간 북극 쇄빙선 건조 협력 가속화 ····· 4
아이슬란드 | 유럽 5개국, 노르딕 방위협력기구 국방협력 강화 ····· 5
노르웨이 | 스발바르 북극 곰 유럽 첫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확인 ····· 6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미국 | 트럼프 행정부, 알래스카주에 토지 이전… LNG 사업 지원 ····· 8
러시아 | 무르만스크 주에 희토류 심층 가공 클러스터 추진 ····· 10
러시아 |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동식 생산물 가공·수집 거점 조성 추진 ····· 12
러시아 | 프로젝트 22220 쇄빙선 '추코트카'호, 해양용 크레인 시운전 완료 ····· 13
핀란드 | 핀란드, 군사 기동력 강화를 위한 북부 철도 투자 확대 ····· 14
스위덴 | 스웨덴 광산기업 LKAB, 북부 핵심광물 개발 '환경허가' 확보 ····· 16
그린란드 | 그린란드, 美 리얼로이스와 희토류 15년 장기 판매계약 체결 ····· 17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 일본-유럽연합, 북극 해저케이블 보호 기술 협력 협의 ····· 19
인도 | 인도·노르웨이,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북극·우주 협력도 확대 21

남극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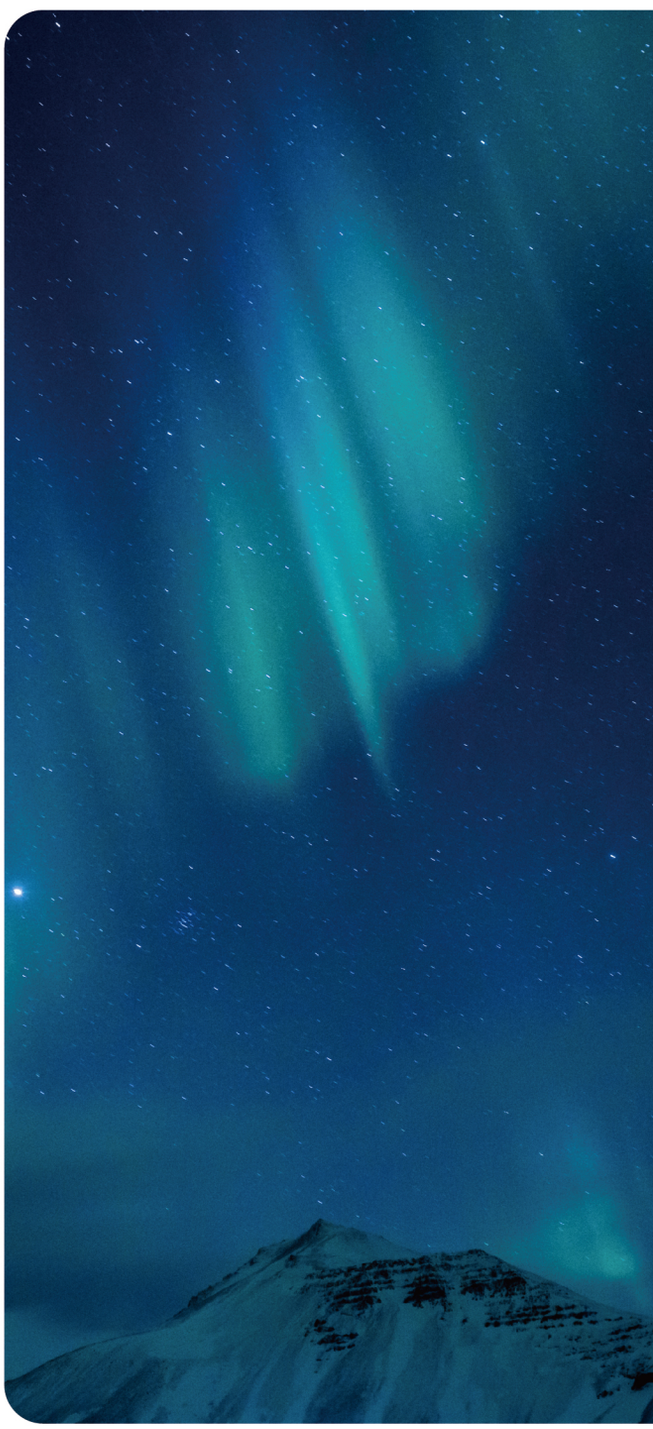
영국남극조사단, 남극 연구 세계 1위 재확인…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 22

극지의 창(窓)

신규 북극 전략의 등장과 안보 이슈의 부상 ····· 24

북극과 사람

북극에서의 DX: 통신 연결성에서 데이터·디지털 문화유산까지 ····· 35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본 소식지는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북극이사회, ‘해양 연결성 콘퍼런스’ 개최 (2026.5.7.)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는 UArctic과 협력하여 5월 26~28일 페로제도 토르스하운(Tórshavn)에서 ‘해양 연결성 콘퍼런스(Ocean Connectivity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UArctic Congress 2026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되며, 북극이사회 의장국 공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양(Oceans)’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 덴마크 왕국은 2025~2027년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북극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에너지 전환 해법 ▲해양 ▲북극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을 우선순위로 제시

북극이사회는 ‘Sub-Arctic and High Arctic connectivity’를 주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온난화와 해빙 감소에 따라 북극 해양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변화의 원인을 파악해 예측 가능성 및 효과적 관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 국제해양콘퍼런스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생물다양성 및 회유성 종 ▲오염물질 이동 ▲지역 간 종 이동 ▲외래종의 북극 유입 가능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북극이사회가 제시한 세부 세션은 ▲해양 역학 및 관측 시스템(Ocean Dynamics and Observation Systems) ▲해양오염 및 생태계 영향(Marine Pollution and Ecosystem Impacts)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북극 해운(Safe, Sustainable & Resilient Arctic Shipping) ▲해양생물다양성·보전 및 원주민 관리(Marine Biodiversity, Conservation & Indigenous-led Stewardship) ▲지속가능한 이용, 새로운 압력 및 해양의 미래(Sustainable Use, Emerging Pressures & Ocean Futures) 등이다.

북극이사회는 이번 콘퍼런스가 북극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연구 성과와 원주민 지식(Indigenous Knowledge)을 연결함으로써 모범사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퍼런스 마지막 날인 5월 28일은 ‘해양의 날(Ocean Day)’로 지정되어 북극이사회 해양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고위급 전체회의, 발표,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글: 정다현 연구원
Jeong.DH@kmi.re.kr

출처1: https://arctic-council.org/about/kingdom-of-denmarks-chairship-2025-2027/

출처2: https://www.uarcticcongress.fo/

북극권 국가 정책

캐나다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과 북극 안보 협력 강화 (2026.5.16.)

캐나다는 자국 북극 영토 방위를 더 이상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북유럽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 3월 캐나다와 북유럽 5개국은 군사 조달 및 방위 생산 확대, 사이버 공격 등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무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유럽 당국자들과 집단방위와 북극 안보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난드 장관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캐나다가 새로운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북극 안보 협력 확대를 외교 거점 강화와 연계하고 있다. 실제로 2026년 2월 그린란드 누크(Nuuk)에 영사관을 개설했으며, 아난드 장관이 북유럽 외교장관들을 캐나다 북극 지역으로 초청했다. 아울러 2026년 4월 알렉산데르 스투브(Alexander Stubb) 핀란드 대통령이 12년 만에 캐나다를 방문하여 북극 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북극에서 동맹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접근성 확대, 러시아의 군사 기지 보유, 중국의 북극권 활동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많은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극 지역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북극에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하면서 북유럽 국가들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글: 정다현 연구원
Jeong.DH@kmi.re.kr

출처: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canada-deepens-arctic-defense-ties-with-nordics-after-trump-threats-2026-05-16/

북극권
국가 정책

캐나다

핀란드

미국

북극권 국가 간 북극 쇄빙선 건조 협력 가속화 (2026.5.7.)

캐나다·핀란드·미국 정부 대표단은 5월 6~7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ICE Pact(Icebreaker Collaboration Effort)' 회의를 개최하여 북극 및 극지 해역에서 필요한 쇄빙선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극의 안보와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3국이 쇄빙선 건조를 위한 산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나라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을 기존의 조정 단계에서 실제 이행 단계로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국은 조선소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건조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물론 쇄빙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 및 협력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내 공급업체 참여 확대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공동의향서(Joint Statement of Intent)를 바탕으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도 확정했다. 주요 과제는 ▲생산 역량 확대 및 3국 산업 협력 강화 ▲조선 및 극지 기술 분야 인력 양성 ▲글로벌 쇄빙선 시장에서 협력국의 인지도 및 정합성 제고 ▲가치사슬 전반의 병목 해소와 납기 개선 ▲쇄빙·추진체계·북극 운항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등이다.

캐나다와 핀란드는 3국 산업협력 체계를 통해 미국의 북극안보 쇄빙선(Arctic Security Cutters)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계 전문성과 조선소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캐나다 기업인 시스팬(Seaspan)과 데이비(Davie)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의 북미·대서양 조선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수요와 수출 기회를 파악하고, ICE Pact를 통해 이뤄지는 투자가 장기적인 성장, 국내 공급망 강화, 캐나다 기업의 국제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극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도 정보 공유, 공동 역량 개발 및 조달 방식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글: 정다현 연구원
Jeong.DH@kmi.re.kr

출처: https://www.canada.ca/en/public-services-procurement/news/2026/05/national-coordinators-build-on-successes-of-the-icebreaker-collaboration-effort.html

북극권 국가 정책

아이슬란드

유럽 5개국, 노르딕 방위협력기구 국방협력 강화 (2026.5.6.)

아이슬란드·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5개국 국방장관은 5월 5~6일 노르웨이 트뢰넬라그(Trøndelag)에서 개최된 노르딕 방위협력기구(Nordic Defence Cooperation, NORDEFCO) 회의에서 역내 안보·방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NORDEFCO 의장국인 노르웨이 주재로 개최됐으며, 공동성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부담 분담 변화에 따라 유럽과 북유럽 지역에서 더 큰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유럽 국가들은 NATO 체계에서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국경 이동 병력 지원 ▲관제공역 협력 ▲드론 및 대드론 체계를 중점 분야로 제시했다. 회의 기간 중 참석자들은 노르웨이 외를란(Ørland) 공군기지와 신테프 오션(SINTEF Ocean)을 방문하여 혁신과 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공동의 가치와 두터운 신뢰, 공유된 지리적 정보를 기반으로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으로 북유럽 5개국이 모두 같은 동맹 체계에 속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진행되기 어려웠던 공동 논의·계획·작전 등의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북유럽 5개국은 NATO가 국방협력의 핵심 프레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북유럽 국방협력이 역내 안보와 방위, 지역 안정, 위기관리, 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국의 국방 역량을 국가 및 동맹에 중심을 맞춤으로써, 북유럽 지역 내 NATO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 전체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정다현 연구원
Jeong.DH@kmi.re.kr

출처1: https://www.regjeringen.no/en/whats-new/joint-statement-nordic-defence-cooperation/id3158727/

출처2: https://www.government.se/statements/2026/05/joint-statement-by-the-nordic-ministers-of-defence—nordic-defence-cooperation/

출처3: https://www.nordefco.org/default.aspx

북극권 국가 정책

노르웨이

스발바르 북극 곰, 유럽 첫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확인 (2026.5.20.)

노르웨이 국립수의과학원(Norwegian Veterinary Institute, 이하 NVI)은 스발바르 제도 북부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의 라우드피오르덴(Raudfjorden) 일대에서 발견된 북극곰과 바다코끼리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사례는 노르웨이는 물론 유럽에서 북극곰에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첫 사례이다.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북극곰은 약 1년생 수컷이며, 바다코끼리는 성체로 파악되었다. 두 개체는 5월 중순 현지 관광가이드가 처음 발견했는데, 노르웨이 극지연구소(Norwegian Polar Institute, 이하 NPI)가 NVI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다. 또 같은 지역에서는 뒷다리가 절뚝거리거나 마비 증상을 보이는 북극곰 2마리도 관찰되어 광견병이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중증 감염병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NVI 소속 수의사 2명이 현지에 파견되어 헬기를 통해 사체 위치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였다. 분석 결과 북극곰과 바다코끼리 뇌 조직에서 H5N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나, 광견병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NVI 전문가들은 사체가 발견 당시 이미 상당 기간 방치된 상태였으나, 두 개체의 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점을 고려할 때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H5N5형 바이러스는 최근 스발바르 야생동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NVI에 따르면 해당 아형은 2022년 스발바르 야생 바닷새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2023년 바다코끼리, 2025년 북극여우에서도 검출된 바 있다. 반면, 북극곰 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2023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북극곰의 H5N1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북극곰에서 확인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스발바르 사례는 유럽 북극권에서 북극곰 감염이 처음 공식 확인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류를 넘어 포유류로 확산되는 최근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유럽 내 포유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 유지원 연구원
jwyoo25@kmi.re.kr

출처1: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bird-flu-found-polar-bear-europe-first-time-svalbard-2026-05-19/

출처2: https://www.vetinst.no/en/news/first-detection-of-avian-influenza-in-a-polar-bear-on-svalbard

출처3: https://wwwnc.cdc.gov/eid/article/30/8/24-0481_article

출처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apr/30/first-walrus-bird-flu-death-arctic-islands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노르웨이

바이러스가 북극과 같은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NVI 조류 인플루엔자 전문가 또한 북극 지역의 취약한 야생동물 개체군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북극곰은 기회주의적 포식자이자 청소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조류나 해양포유류 사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24년 스발바르 호펜섬(Hopen Island)에서는 바다코끼리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바, NVI는 육식성 또는 사체를 섭취하는 야생동물이 감염된 사체를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H5N5 바이러스가 포유류 간 지속 전파에 적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르웨이 국립수의과학원은 북극곰과 바다코끼리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포유류 감염에 특화된 변이를 보이는지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조류에 적응한 바이러스이지만, 감염 조류와의 직접 접촉 또는 감염 사체 섭취 등을 통해 포유류로 우발적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북극 지역에서의 야생동물 감염병 감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빙 감소, 해양생태계 변화, 철새 이동 경로 변동, 포식자-피식자 관계 재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병원체의 유입 및 확산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스발바르와 얀 마 옌(Jan Mayen) 등 고위도 북극 지역에서는 2022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은 철새와 해조류의 계절 이동이 바이러스의 북극권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극권에서도 조류뿐 아니라 북극여우, 바다코끼리, 북극곰 등 포유류를 포함한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르웨이는 현재 NVI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시를 수행하면서 H5·H7형 바이러스의 발생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체계 운영, 현장 시료 채취 및 유전자 분석, 광견병 등 유사 증상을 보이는 질병과의 감별진단 등을 통해 북극 지역 질병 감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알래스카주에 토지 이전… LNG 사업 지원 (2026.5.7.)

5월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외딴 북극 지역의 광산 개발에 따른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200마일(약 322km) 가량 되는 앰블러 로드(Ambler Road) 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140만 에이커 규모의 토지를 알래스카주에 이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토지 이전이 알래스카 북부 노스 슬로프(North Slope) 지역의 천연가스를 아시아 국가들과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초대형 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Alaska LNG)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번에 이전된 토지는 유콘강 북쪽의 콜드풋(Coldfoot) 인근 달턴 하이웨이(Dalton Highway)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 지역은 800마일(약 1,287km) 길이의 트랜스 알래스카 송유관(Trans-Alaska Pipeline)의 일부 구간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 지역은 달턴 유틸리티 회랑(Dalton Utility Corridor)의 일부로, 향후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경우 그 노선이 포함되는 구간이다. 또한 계획 중인 앰블러 로드는 구리, 아연, 납 및 기타 광물 자원이 매장된 광산 지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광물들은 경제적·국방적 가치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가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로 지정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주지사는 미국 내무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알래스카가 자원을 책임감 있게 개발하고, 주 전역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진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번 토지 이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1970년대 초반 시행된 2건의 공공토지명령(Public Land Orders)을 철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해당 공공토지명령은 알래스카주로의 토지 이전과 광물 탐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철회 조치로 알래스카주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이후 토지 이전이 가능해졌다.

글: 한다희 연구원
dhhan@kmi.re.kr

출처1: https://en.highnorthnews.com/politics/trump-administration-transfers-land-to-alaska-to-support-alaska-lng/1110857

출처2: https://www.adn.com/business-economy/energy/2026/05/06/trump-administration-transfers-land-to-state-to-support-ambler-road-and-alaska-lng/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미국

<환경단체 자연환경 훼손 우려>

환경보호 단체들은 이번 공공토지명령 철회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토지 이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앰블러 로드 개발을 촉진하여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을 산업적 광산 개발에 개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 정부의 보호 조치가 약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계형 수렵과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를 지원해 온 제도적 보호장치도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토지 이전 이후에도 알래스카주는 1958년 알래스카 주 승격법(Alaska Statehood Act)에 따라 배정받은 총 1억 500만 에이커(약 42.5만 km^2)의 토지 권리 가운데 약 380만 에이커(약 1.54만 km^2)를 추가로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토지 이전은 연방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의 알래스카 토지 이전 프로그램(Alaska Land Transfer Program)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림〉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경로(노스슬로프~케나이반도)

자료: High North News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무르만스크 주에 희토류 심층 가공 클러스터 추진 (2026.5.22.)

러시아가 북극권 핵심광물 산업 육성을 위한 희토류 금속(REE) 심층 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단순 자원 채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북극 지역 내 고부가가치 가공 산업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최근 타스(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르만스크 주를 중심으로 희귀·희토류 금속 심층 가공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동·북극개발부는 “중요한 전략 과제는 단순 채굴이 아니라 원료의 가공”이라며, 복수의 희귀·희토류 금속 광상을 기반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러시아의 기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극 개발 전략과 핵심광물 공급망 자립 정책이 결합된 사업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서방 제재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첨단산업 핵심 원료의 자국 내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안톤 바산스키(Anton Basansky)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차관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희토류 금속 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극동 및 북극 지역 희토류 자원이 일부 품질 지표 측면에서 러시아 평균뿐 아니라 해외 주요 광상보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북극 및 극동 지역에 적용 중인 국가 지원 제도가 희토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북극권 개발 촉진을 위해 세제 감면, 투자 인센티브,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러시아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극동 및 북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통합 우대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제도의 핵심 우선 분야 가운데 하나로 희토류 산업을 포함한 첨단기술 프로젝트 지원을 제시했다.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arctic-russia.ru/news/v-murmanskoy-oblasti-sozdadut-klaster-glubokoy-pererabotki-redkozemelnykh-metallov/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이번 사업의 중심지로 거론된 무르만스크 주는 러시아 북극 전략의 핵심 거점 지역 가운데 하나다. 무르만스크 항은 북극항로(NSR)의 서부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중 결빙이 적은 부동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또한 콜라 반도(Kola Peninsula) 일대에는 러시아 주요 광물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로보제로(Lovozero) 희토류 광상과 히빈(Hibiny) 광물지대는 러시아 북극권 희토류 및 희귀금속 산업의 핵심 자원 기반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기존에도 희토류 자원 채굴을 진행해 왔으나, 실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분리·정련·고순도 가공 등 다운스트림 분야 역량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 반도체, 군수산업, 우주항공, 첨단 전자제품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광물로 분류된다. 특히 영구자석, 레이더, 정밀유도무기, 전력 시스템 등 첨단 제조업과 안보 산업 전반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요국 간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원광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북극 지역 내부에 희토류 가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극권 자원을 활용해 자국 내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고, 첨단 제조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북극포럼(International Arctic Forum)에서 북극 지역 희토류 가공 산업 육성을 북극 개발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연방 프로젝트인 「지질학: 전설의 부활(Geology: Revival of the Legend)」틀 안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광물 탐사 확대와 전략광물 자원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북극 지역을 미래 자원·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러시아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참여 기업, 생산 목표량, 완공 시기, 정련 설비 규모 등 세부 계획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동식 생산물 가공·수집 거점 조성 추진 (2026.5.15.)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북극권 지역에서 이동식 생산물 수집·가공 거점이 조성될 예정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북부지역개발 및 소수민족 지원청은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동식 수집·가공 거점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규모는 1,850만 루블(약 24만 달러)이며, 사업 수혜자는 전체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러시아 북극권에 포함되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현지 당국은 이동식 수집·가공 시설을 순록 유목민 이동 지역과 어민·사냥꾼들이 활동하는 지역 인근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북부 지역 전통 생산물의 수집과 저장, 가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당국은 이동식 시설을 통해 생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산지와 가공·보관 시설 간 이동 거리를 줄여 북부 지역 주민들의 운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톤 나르추가노프(Anton Narchuganov)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북부지역개발 및 소수민족 지원청장은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이 생산물 수집·가공 인프라를 전통 생업 활동 지역 가까이 배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생산물을 현장에서 납품할 수 있고, 운송 비용 절감과 판매 기회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순록 사육과 어업, 사냥에 종사하는 가족 및 씨족 공동체의 추가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오는 5월 28일까지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2026년 10월 1일까지 이동식 수집·가공 거점 구축과 운영 개시를 완료해야 한다. 현지 당국은 사업 일정과 운영 방식이 북극 지역 현지 여건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동식 시설 구축을 통해 북부 지역 전통 산업 생산물의 현장 중심 수집·가공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krasnoyarsk.bezformata.com/listnews/mobilnih-punktov/159662542/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프로젝트 22220 쇄빙선 '추코트카'호, 해양용 크레인 시운전 완료 (2026.5.26.)

러시아의 군수산업 지주기업인 '킹기셉 기계제조공장(Kingisepp Machine-Building Plant, KMZ)'이 프로젝트 22220형 원자력 쇄빙선 '추코트카(Chukotka)'호에 탑재되는 해양용 브리지 크레인(bridge crane)의 설치 감독 및 시운전 작업을 완료했다.

KMZ은 이번 장비가 3.2톤의 하중을 처리할 수 있는 해양용 크레인으로, 선박 중앙 구획에서 운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비는 북극의 혹독한 환경 조건 속에서 화물 상·하역 작업과 각종 기술 작업 수행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크레인은 KMZ 산하 설계국인 SKB-2가 개발한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장비는 필요한 공장 시험을 완료했으며, 러시아 선급기관인 러시아 해사등록청(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RS)의 인증서를 받은 뒤 조선소로 인도되었다. KMZ는 설치 감독 과정에서 자사 기술진이 장비 조립과 제어 시스템 조정 작업을 수행했으며, 하중 조건에서 모든 기계 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류 시험(mooring trials) 결과에 따라 해당 크레인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 쇄빙선 운영기관인 아톰플롯(FSUE Atomflot) 관계자들에게 공식 인도 및 승인됐다고 밝혔다.

원자력 쇄빙선 '추코트카' 호는 프로젝트 22220의 다섯 번째 선박으로, 러시아 국영 조선그룹 OSK 산하 발틱 조선소(Baltic Shipyard)에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Rosatom)의 발주를 받아 건조되고 있다. 이 쇄빙선은 2020년 12월 16일 기공됐으며, 2024년 11월 6일 진수됐다. 프로젝트 22220형 쇄빙선은 세계 최대 원자력 쇄빙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임무는 북극 서부 지역에서 연중 항행을 지원하는데 있다.

한편, KMZ는 디젤 장비와 열교환 장비, 갑판 장비, 고압 압축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디젤 및 가스터빈 엔진과 발전기, 감속기 등의 수리·정비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portnews.ru/news/392007/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핀란드

핀란드, 군사 기동력 강화를 위한 북부 철도 투자 확대 (2026.5.8.)

핀란드 정부는 최근 군사 기동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 투자 계획에 합의했다. 정부는 국방 측면에서 필요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교량 개선 및 교통노선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총 1억 1,200만 유로 규모의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우선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는 '레일 노르디카(Rail Nordica) 프로젝트'로, 북부 핀란드 철도의 궤간*을 유럽 표준궤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북부 지역에서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를 직접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핀란드 정부는 북부 핀란드의 토르니오(Tornio)~케미(Kemi) 구간에 유럽 표준궤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계획 수립은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통신부 룰루 란네(Lulu Ranne) 장관은 원활한 교통 인프라는 핀란드의 포괄적 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축의 하나로, 북부 국경 연결망은 북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EU와 NATO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재 핀란드 철도망(1524mm)은 유럽 표준궤(1435mm)보다 더 넓은 궤간을 사용

유럽 표준궤 전환은 철광석 선(Iron Ore Line) 및 오포텐 선(Ofoten Line)을 통해 북부 노르웨이의 나르비크(Narvik) 항만까지 연결되는 원활한 철도망 구축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나르비크 항은 북유럽 지역에서 동맹군 증원 병력을 수용하고 이를 스웨덴과 핀란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핵심 관문 중 하나로 평가된다.

나르비크항 보르게 에드바르센 클링안(Børge Edvardsen Klingan) 항만 국장은 핀란드의 표준궤 전환 및 북부 교통인프라 투자가 북극 고위도 지역 전체의 물류·안보 환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발트해 진입부에서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물류 이동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핀란드가 나르비크 항으로 연결되는 서측 대체 물류회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북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핵심광물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나르비크 물류회랑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오포텐 선(Ofoten Line)의 수송능력 확대와 복선화가 필

글: 한다희 연구원
dhhan@kmi.re.kr

출처: https://en.highnorthnews.com/business/plans-of-seamless-railway-connections-from-northern-finland-to-northern-norway/1110975

요하며, 노르웨이 정부도 철도·항만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노르웨이 측의 물류 처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림〉 레일 노르디카(Rail Nordica) 사업 경로 지도

자료: https://www.railwaygazette.com/in-depth/finland-standard-gauge-rail-links-are-on-the-agenda/69748.article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스웨덴

스웨덴 광산기업 LKAB, 북부 핵심광물 개발 '환경허가' 확보 (2026.5.27.)

스웨덴 광산기업 LKAB은 스웨덴 토지·환경법원에서 북부 룰레오(Luleå)에 조성 예정인 핵심광물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 허가를 얻어 핵심광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계획된 산업단지는 엘캅의 사업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비료 생산에 필요한 인(Phosphorus)과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를 가공하는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엘캅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업이 스웨덴과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원자재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LKAB이 룰레오에 조성할 예정인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EU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에 따른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했다. 이 법은 유럽 내 핵심원자재의 채굴 및 가공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EU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앨캅은 말름베리에트(Malmberget) 광산, 룰레오(Luleå) 핵심광물 산업단지, 키루나(Kiruna) 페르 가이예르(Per Geijer) 광상 등 3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광물 분야에서 유럽 차원의 가치사슬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은 광물 비료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로, 전 세계 농업 생산과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은 인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주요 공급국 가운데 하나였다.

희토류는 전기화와 디지털화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기용 발전기에 사용되는 영구자석 등을 만드는데 활용된다. 현재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 유럽은 사실상 자체적인 희토류 채굴·생산 기반이 거의 없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 한다희 연구원
dhhan@kmi.re.kr

출처: https://en.highnorthnews.com/business/key-piece-in-place-for-critical-minerals-initiative-in-northern-sweden/1112172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그린란드

그린란드, 美 리얼로이스와 희토류 15년 장기 판매 계약 체결 (2026.5.21.)

미국 광물개발 기업인 크리티컬 메탈스(Critical Metals Corp.)가 5월 21일 미국 희토류 기업 리얼로이스(REalloys)와 그린란드 탄브리즈(Tanbreez) 희토류 프로젝트 생산물에 대해 15년 장기 판매계약(Offtake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서방권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리얼로이스사(社)는 탄브리즈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정광(Rare Earth Concentrate)의 연간 생산량 중 15%를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계약 기간은 15년이며, 추가 연장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방위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Dysprosium)과 터븀(Terbium) 함량이 높은 물량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탄브리즈 프로젝트는 그린란드 남부 일리마우싹(Ilimaussaq) 화성암복합체에 위치한 초대형 희토류 광산 개발 사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중희토류(Heavy Rare Earth Elements) 매장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영구자석 생산에 필요한 중희토류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미국과 유럽이 전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다.

* 탄브리즈 프로젝트는 크리티컬 메탈스가 개발 라이선스를 보유한 2억 9,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탄브리즈 광산에는 최대 47억 톤 규모의 희토류를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물이나 광상이 자리 잡고 있는 암석 모석(host rock)이 있고, 전희토류산화물(TREO) 약 2,920만 톤, 중희토류(HREE) 1,950만 톤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2028년 말 첫 채굴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번 계약은 단순한 상업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광물 확보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탄브리즈 프로젝트는 그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과거 중국계 기업의 탄브리즈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비공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이후 미국 기업인 크리티컬 메탈스가 프로젝트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2026년 4월 그린란드 정부는 크리티컬 메탈스의 탄브리즈 프로젝트 지분 확대를 승인하여 현재 기준 약 92.5%의 지분을 보유하게 했으며,

글: 유지원 연구원
jwyoo25@kmi.re.kr

출처1: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ritical-metals-inks-15-year-greenland-rare-earth-deal-with-realloys-2026-05-21/

출처2: https://www.investing.com/news/company-news/critical-metals-secures-15year-rare-earth-offtake-deal-with-realloys-93CH-4703863

출처3: https://www.sahmcapital.com/news/content/critical-metals-signs-15-year-tanbreez-rare-earth-concentrate-offtake-with-realloys-2026-05-22

출처4: https://www.criticalmetalscorp.com/projects/project-tanbreez/

출처5: https://www.nsenergybusiness.com/news/critical-metals-gets-licence-extension-for-tanbreez-rare-earth-mine-in-greenland/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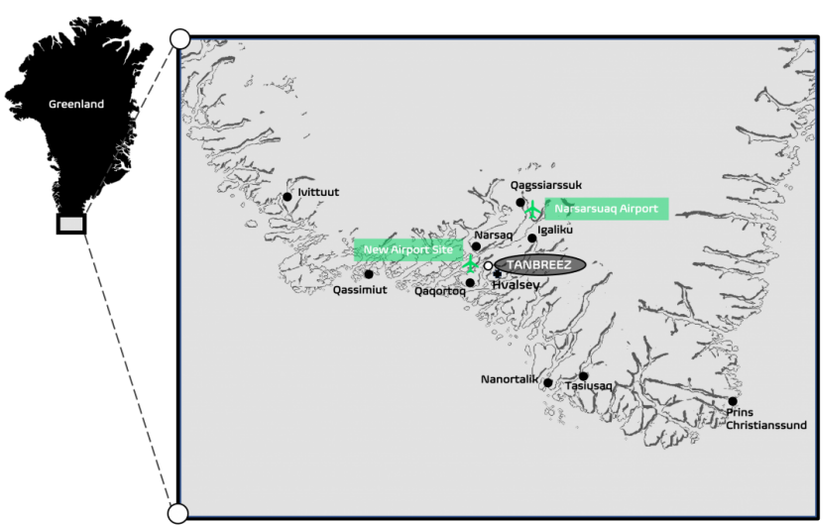
그린란드

이후 회사는 잔여 지분 확보를 위한 추가 인수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을 탄브리즈 프로젝트의 상업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계약 발표 직후 크리티컬 메탈스의 주가는 장중 약 8% 상승했으며, 향후 프로젝트 개발 자금 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탄브리즈 프로젝트는 최근 북극권에서 진행되는 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과거 북극 개발이 에너지 자원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희토류·흑연·리튬 등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새로운 전략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그린란드를 중국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기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광산 개발 및 가공시설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린란드는 향후 북극 지역의 기후변화·과학협력 중심 의제뿐 아니라 경제안보 및 공급망 경쟁의 핵심 무대로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탄브리즈 프로젝트 위치



자료: https://tanbreez.com/project/mine-location-area/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일본–유럽연합, 북극 해저케이블 보호 기술 협력 협의 (2026.4.27.)

〈그림〉 2022년 Far North Fiber(FNF) 사업:
일본–북미–아일랜드–스칸디나비아 연결망

자료: https://capacityglobal.com/news/arctic-cable-plans-warm-up-as-japan-us-europe an-group-is-formed/

글: 김주형 부연구위원
jhkim7664@kmi.re.kr

출처1: https://biz.chosun.com/jp/jp-international/2026/04/27/O4EA3HUGTFGKDCA6FQG5KSSDPE/

출처2: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31st-eu-japan-ict-dialogue-advancing-digital-partnership

세계 핵심 통신망인 해저케이블을 겨냥한 공격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이 케이블의 보호·부설·유지보수 기술 분야에서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러시아를 우회하는 경로를 확보해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EU는 북극해의 북미 루트를 따라 일본과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저케이블 경로 건설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5월에 열리는 일·EU 디지털 파트너십 이사회 장관급 회의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포함될 전망이다. 양측은 케이블 절단, 손상, 의심 선박 접근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케이블 손상을 조기에 탐지하는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EU 디지털 협력의 연장선에 있다. EU는 2026년 3월 27일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EU–일본 ICT Dialogue에서 인공지능, 5G·6G, 양자암호, 사이버보안과 함께 해저케이블과 북극 연결성을 포함한 안전한 연결성 협력 기회를 논의한 바 있다. 즉, 북극해 신규 회선 협의가 단발성 구상이 아니라, 일본–EU 간 디지털 파트너십과 ICT 협력의 공식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해저케이블은 해저에 설치되는 통신 인프라로 전 세계에는 총연장 약 15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저케이블 약 50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태평양과 대서양에 집중되어 있다. 해저케이블은 국제전화, 인터넷 데이터, 금융거래, 군사통신 등 각종 데이터를 전송하며, 국제통신의 99%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은 해저케이블 분야의 강국이다. 프랑스에는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웍스(ASN)가 있고, 일본에는 NEC 등 대표적인 해저케이블 제조·부설 기업이 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ASN은 해저케이블 부설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약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NEC는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과 EU의 해저케이블 협력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최근 주요국들이 통신 인프라를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해저케이블 방호 협력도 강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저케이블이 적대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상대국의 지휘통신 체계를 교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발트해에서 해저케이블 손상 사례가 발생했다. 2025년 1월에는 라트비아와 스웨덴을 잇는 해저케이블이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다. 또 대만 당국은 대만 해역에서 케이블을 절단한 혐의로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으며, 정보 도청 장치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

츠치야 모토히로(土屋大洋) 게이오대 교수는 “해저케이블은 금융거래, 무역, 군사작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케이블 절단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서는 러시아 인근 해역을 피하는 북극해 루트에 케이블을 부설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측의 계획이 실현되면 일본과 유럽 간 통신 속도가 약 3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옵서버 국가 정책

인도

인도·노르웨이,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북극·우주 협력도 확대(2026.5.18.)

인도와 노르웨이가 양국 관계를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Green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고, 우주·보건·디지털 개발 분야 협정을 체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18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청정에너지, 기후 회복력, 블루이코노미, 녹색 해운, 북극·극지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모디 총리가 유럽 4개국 순방 중 스웨덴에서 노르웨이로 이동한 직후 열렸다. 인도 총리의 노르웨이 방문은 1983년 인디라 간디 당시 총리 이후 40여 년 만이다.

북극과 우주 협력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모디 총리는 "노르웨이는 북극 지역의 핵심 국가"라며 "인도의 북극 연구기지 히마드리(Himadri) 운영을 지원해 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우주연구기구(ISRO)와 노르웨이우주청(Norwegian Space Agency) 간 양해각서 체결이 "우주 협력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정세에 대한 공조도 확인했다. 모디 총리는 "우크라이나든 서아시아든, 우리는 적대 행위의 조기 중단과 평화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퇴레 총리는 "외교를 무기화하고, 무역을 무기화하고, 기술을 무기화하는 이들에 맞서야 한다"며 "보호주의가 커지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규칙 기반 질서를 위해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입장인 것은 아니라며, "오늘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일어난 파할감 테러 공격으로 연기됐던 이번 방문을 언급하며 "그 어려운 시기에 노르웨이는 인도와 굳건히 함께하며 진정한 우정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과 소냐 왕비를 예방했으며, 노르웨이 왕실 공로훈장 대십자장을 받았다.

모디 총리는 19일 오슬로에서 열리는 제3차 인도·북유럽 정상회의(India-Nordic Summit)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스웨덴 총리 등 북유럽 5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의는 인도의 대(對)북유럽 외교를 한층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인도·노르웨이 관계가 녹색 전환과 북극·극지 연구, 우주, 해양경제를 축으로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노르웨이가 북극의 핵심 국가이고 인도가 현지 연구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력 강화는 인도의 북극 외교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글 엄단비 전문연구원
dbu@kmi.re.kr

출처: https://indianexpress.com/article/india/india-norway-ties-green-strategic-partnership-space-health-digital-development-10696377/

남극소식

영국남극조사단, 남극 연구 세계 1위 재확인…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2026.5.14.)

〈그림〉 영국남극조사단장 제인 프랜시스(Jane Francis) 교수와 운영·공학·인프라 책임자 올리버 다크(Oliver Darke)의 모습

출처: 영국남극조사단(British Antarctic Survey)

글: 엄단비 전문연구원
dbu@kmi.re.kr

출처: https://www.bas.ac.uk/news/top-marks-for-uk-science-as-governments-convene-for-antarctic-conference/

세계 각국 남극 관련 정부 대표와 관계자들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를 여는 가운데, 영국남극조사단(BAS)이 남극과 남대양 연구 분야 세계 최고 기관으로 다시 한번 평가됐다. 이번 회의에는 BAS 소장인 제인 프랜시스(Jane Francis) 교수와 극지운영국장 올리버 다크가 영국 대표로 직접 참석했다.

이번 평가는 '남극 연구 동향 보고서 2025'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스코퍼스(Scopu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과학 논문을 분석한 결과, BAS는 전 세계 단일 기관 가운데 남극 관련 연구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고품질 학술지 게재 실적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국은 주요 남극 연구국 가운데 분야 가중 인용 영향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석됐다.

BAS 과학국장 페트라 하일은 “단순히 연구를 많이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양질의 연구를 생산하는 문제”라며 “최상위 학술지 게재는 우리의 과학이 세계 지도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책상 위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남극소식

주목할 점은 중국의 빠른 부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남극·남대양 연구 논문 생산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논문 발표국으로 올라섰다. 2022년 전체 논문 발표량에서 미국을 앞선 데 이어, 2024년에는 고영향 논문에서도 미국을 추월했다. 2017년 이후 남극 관련 논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서남극의 빠른 온난화와 빙붕 불안정 등 기후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남극 관련 논문 수는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BAS와 영국은 기존 주요 연구 강국들보다 이러한 흐름을 잘 견뎌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남극조약 체제에서 과학 연구가 갖는 의미도 강조했다. 각국이 지속적인 과학 활동을 통해 남극에 대한 책임과 기여를 증명해야 하는 만큼, 연구 산출물은 일종의 '신뢰의 통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BAS는 다국적 국제 공동연구를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 평가됐으며, 이를 통해 남극 외교와 조약 체제 내 영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 극지운영국장 올리버 다크는 “남극조약 아래 국제협력이 어떻게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그 연구가 세계 정책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직접 보고 있다”며 “영국의 과학기지, 선박, 항공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대양 해양보호구역 지원과 취약한 생태계 보호 등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기준을 옹호하는 데 영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남극 연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극지 지역에서 과학적 영향력의 균형이 어떻게 바뀔지를 둘러싼 국제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원
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전략연구실

신규 북극 전략의 등장과 안보 이슈의 부상

1. 변화하는 북극 환경과 북극 정책

현재 북극의 온난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약 3배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은 북극 이상 기온 수치가 전 지구 평균을 11년 연속 초과한 해로 기록되었다.[1] 2024년 북극의 여름은 기록상 가장 습한 여름이었고,[2] 2025년 기준 19년 연속 북극해의 최소 해빙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3] 이러한 지속적인 해빙 손실이 북극의 여름철 대기 불안정을 야기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국가들에 극단적 기상 이변 현상을 일으키는 등 전례 없는 규모의 기후 리스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북극 기후 변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해빙의 가속화로 인해 북극항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한 관심은 북극해 해상 인프라 구축, 쇄빙·내빙선 성능 개발, 북극해 매장 자원 개발 기회 확대 등에 대한 필요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극권 8개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7개국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러시아와의 협력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극이사회 설립에 관한 오타와 선언(Ottawa Declaration, 1996)에 따라 군사·안보 이슈를 다루지 않던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에 기반한 기존의 북극 협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북극해를 둘러싼 안보 및 군사 문제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각각 2023년 4월, 2024년 3월 가입하는 등 전통적인 군사적 중립국 노선을 탈피하여 기존의 안보 정책·전략 방향을 전환하였다. 다수 국가들은 최근 북극 전략을 새롭게 구상·발표하여 북극권 역내 지정학 구도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극의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전략·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북극권 국가들의 북극 정책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 북극권 국가 신규 북극 전략 분석

변화하는 북극권 역내 정책 환경은 북극권 8개국의 북극 전략과 정책의 우선순위, 기조의 변화를 낳았다. 이 같은 현상은 '북극 예외주의' 원칙이

글: 유지원 연구원
jwyoo25@kmi.re.kr

극지의 창

붕괴되었다고 판단되는 2022년 2월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024~2025년을 전후로 북극권 국가들이 신규 전략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들 전략에서는 북극권에서의 안보·국방 역량 강화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표 1〉 2022년 2월 전후 북극권 국가 북극 정책·전략 발표 여부

국가명	북극권 국가 북극 정책	
	'22.2월 전	'22.2월 후
미국	미국 국방부 북극 전략에 관한 의회 보고서('19.6)	북극지역 국가 전략('22, 행정부)
		미 국방부 북극 전략('24, 국방부)
캐나다	캐나다 북극 및 북부지역 정책 프레임워크('19)	캐나다 북극 대외 정책('24)
		우리의 강하고 자유로운 북부지역: 캐나다 국방을 위한 새로운 비전('24)
러시아	북극항로 개발계획 2035('19)	–
	북극개발전략 2035('20)	
	북극개발 및 안보전략 2035('20)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부 북극 정책 – 사람, 기회 그리고 북극에서의 노르웨이의 국익('21)	북부에서의 노르웨이 – 새 시대를 위한 북극(High North) 전략('25)
핀란드	핀란드 북극 정책을 위한 전략('21)	핀란드 북극외교안보정책('25)
스웨덴	스웨덴 북극 지역 전략('20)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북극 정책에 대한 의회 결의안('11)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북극을 위한 스웨덴 전략('26)
	아이슬란드 북극지역 관련 이슈 정책('21)	
덴마크 왕국 (그린란드, 페로제도)	덴마크 왕국 북극 전략('11~20)	그린란드 외교, 안보, 국방정책: 세계 속의 그린란드, 우리와 관련된 일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24)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그린란드)가 신규 전략을 연이어 발표했는데, 대다수의 신규 전략 발표 시기는 2024~2025년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국가의 최신 전략을 중심으로 북극 정책환경 변화의 반영 양상과 전략에 기반한 국가별 북극 정책 이행 현황을 검토한다.

(1) 미국 북극 전략

미국은 1867년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매입한 이후, 1959년 이를 제49번째 주(州)로 편입하며 북극으로의 영토 확장을 추진해왔다. 이후 1971년 닉슨 행

극지의 창

정부 시기 발표된 NSDM-144를 통해 최초의 북극 정책 문서를 마련하고, 알래스카를 포함한 북극 지역의 환경 위험 최소화, 국제 협력 증진, 안보적 이익 보호를 축으로 북극 전략을 발전시켜왔다.[4] 이러한 기조는 2019년 미 국방부의 「북극 전략에 관한 의회 보고서(Report Congress, Department of Defense Arctic Strategy, '19.6.)」에서도 확인된다. 이 문서는 북극을 안보·전략 경쟁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미국의 주권 보호와 국토 방위,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 강화, 경쟁국의 북극 진출 견제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북극을 북극권 연안국의 영토가 포함된 '공용 공간'으로 인식하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은 보장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5]

2022년 2월 이후에는 「북극지역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22.10.)」을 발표하고 2023년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과거 북극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데, ① 안보, ②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③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④ 국제협력과 거버넌스 등 4대 전략 축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별로 세부 목표 및 이행 조치를 제시하였다.[6] 전략 발표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북극 정책을 기후 회복력 강화 및 토착민 권리 존중의 원칙 위에 구축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심화를 통해 북극 내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확대하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었다.

2024년에는 '미 국방부 북극 전략(Department of Defense Arctic Strategy, '24.7)' 보고서를 2019년 내용에서 개정·발표하였는데, 2019년 및 2022년 전략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보고서로 2022년 전략에서 제시한 북극해 안보 강화 내용을 국방부 차원에서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7] 특히, 북극해가 미국 본토 방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미국-캐나다 간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그리고 각 정부부처, 민간 연구기관, 비정부단체(NGO)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8]

2024년에 발표된 북극 전략에 기반하여 최근 미 정부는 북극의 지정학 변화에 따른 안보 전략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북극 군사화, 중국의 러시아와의 북극 내 협력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북극에서의 군사 및 해양 감시 역량 강화를 주요 전략과제로 삼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NATO 및 북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 중에 있다. 스웨덴 및 핀란드의 NATO 가입을 계기로 북극 지역에서의 연합 전력 운영 계획 수립 및 대응 능력

극지의 창

공유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 미국의 주도로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Arctic Edge 2025' 연합방위훈련에는 동맹국인 캐나다, 덴마크, 영국이 참여한 바 있다.[9)]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극 지역을 자원 주권 확대 및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핵심 지역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광물·에너지 자원 개발 중심의 현실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나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린란드 합병은 자유 세계 방어를 위한 필수조건" 임을 언급하며, 그린란드 매입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등 그린란드의 희토류 및 전략자원 개발 권한을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발언을 하여 그린란드 자원 확보를 통한 미국의 안보 이익 강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그린란드를 자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 언급하며,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10)]

(2) 캐나다 북극 전략

캐나다는 국토의 약 40%가 북극 및 북부 지역으로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그리고 여러 주로 구성된다. 캐나다 북극 지역에는 약 1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북극 원주민으로 캐나다 전체 인구 1% 미만이 북극 지역에 거주 중이다.[11)] 광활한 북부 영토를 보유한 캐나다의 특성상, 캐나다의 북극 정책과 전략은 북극 지역을 둘러싼 대외 외교 정책과 자국 내 북극 영토에 대한 국내 정책을 포괄하는 성격을 지녀왔다. 이 같은 특성은 2019년에 발표한 「캐나다 북극 및 북부지역 정책 프레임워크(Canad's Arctic and Northern Policy Framework, 2019)」에서도 드러나는데, △복원력 있고 건강한 캐나다 북극 및 북부 원주민 사회, △타 캐나다 지역의 인프라 수준과 괴리가 없도록 강화된 인프라, △지속가능하고 다양하며 포용적인 지역 경제, △북극 원주민의 전통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건강하고 복원력 있는 캐나다 북극 및 북부지역의 생태계, △북극의 새로운 도전과제와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규제기반 국제질서, △안전하고 잘 방비되어 있는 캐나다 북극 및 북부 지역,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회 간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고 민족자결권을 지원하는 화해 과정 등 주요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12)]

2022년 2월 이후에는 2024년에 2개의 북극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들 정책 문서는 과거에 발표된 문서들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첫 번째

극지의 창

정책은「캐나다 북극 대외 정책(Canada's Arctic Foreign Policy, 2024)」이다. 이는 2019년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전략을 근간으로 최근 국제동향에 대응하는 캐나다의 새로운 북극 외교 전략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과 중국을 포함하는 비북극권 국가들이 북극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확대 대응을 제시하고 있어 북극 안보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우려를 엿볼 수 있다.[13)]

주요 핵심 전략은 △주권 강화, △실용적 외교, △북극 거버넌스 리더십, △포용적 외교이며, 세부 전략에는 △캐나다 북극대사 임명,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새 영사관 개설, △북극 내 우방국 외무장관들과의 북극안보대화 추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는 글로벌 북극안보 동향 관련 캐나다 본토 및 관련 지자체, 북극원주민 지도자들과 정보 공유 확대, △북극의 안보 및 과학과 관련된 외교정책을 고려하여 과학 및 연구 조율 이니셔티브 지원, △보퍼트 해 관련 미국과 경계협상 추진 및 한스섬(Hans Island)에 대해 캐나다-덴마크 간 경계협정 이행 마무리 등이 포함되어있다.

2024년에 발표된 두 번째 정책은 캐나다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에서 발표한「우리의 강하고 자유로운 북부지역: 캐나다 국방을 위한 새로운 비전(Our North, Strong and Free: A Renewed Vision for Canada's Defence, 2024)」이다. 이 비전은 북극 지역의 감시 및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 국방 정책으로, 자국의 주권 수호와 국제질서 안정에 기여하는 북극권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력을 △준비된(Ready), △탄력적인(Resilient), △적절한(Relevant) 군대로 재정비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14)]

캐나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북극 안보 및 사이버보안 부문에 주력하여 약 5년간 81억 달러, 향후 20년간 730억 달러 예산을 투입, 방위력으로의 투자를 통한 산업·경제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gram, 이하 CPSP)에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후보자로 선정되어, 현재 최종 수주를 위한 독일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 정책에는 2050년까지 북극항로가 국제항로로서 개방될 것이라는 전망 내용을 담은 것은 물론, 이에 대비한 북극 항만 개발, 북서항로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쇄빙선 도입 및 해안경비대 역량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극지의 창

(3) 노르웨이 북극 전략

노르웨이의 북극 정책은 과거부터 바렌츠 지역의 인접 국가들인 스웨덴, 핀란드와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며, 북극 안보와 자원 주권, 지역 공동체 발전을 핵심 축으로 설정해왔다. 특히, 노르웨이 북부 지역은 자원과 해양 접근성 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경제 성장과 안보 이익에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노르웨이 정부는 북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하듯, 2021년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정부 북극 정책(The Norwegian Government's Arctic Policy, 2021)」을 통해, 북극지역에 대한 외교 및 안보 정책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외교·안보 정책 및 접근 방식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북극 지역에서의 국가간 협력 강조, △북극의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접근방식 집중, △UN SDGs를 위한 노력 경주 강조, △북노르웨이의 지속적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북극지역 일자리 창출 및 가치 창출, △북극 원주민 사회 정체성 및 문화 보존 등과 같은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다.[15)]

이후 노르웨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극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25년 5월 최초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5.5.)」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 노르웨이는 현재를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상황에 직면한 시점으로 평가하면서 이 전략을 기반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주권 수호를 위해 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북극 지역 동맹국 군들과의 합동 및 연합 군사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16)]

이어, 2025년 노르웨이 정부의 신규 북극전략인 「북부에서의 노르웨이 - 새 시대를 위한 북극(High North) (Norway in the North – A High North policy for a new era, '25.8)」이 발표되었다. 이는 향후 몇 년간의 노르웨이 정부의 북극 역내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향후 정부가 예산 편성 및 기타 정책 기발 과정에서 해당 전략을 활용할 예정이다.[17)]

이 전략을 통해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서의 활동(action)과 영향력의 자유, △북부의 안보, 활동 및 대비를 보장하는 총체적 방어, △안전

극지의 창

하고 번영하는 북부 지역 사회, △북부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인프라,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개발 등의 우선 분야를 제시했다. 특히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가장 큰 안보 정책적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안보 강화를 위해 북유럽 지역, NATO,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군, 북극 연구, 방위 대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외무부에 북유럽 국가와의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특히, 노르웨이는 이 전략의 발표를 계기로 NATO와 유럽연합(EU)의 정책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스발바르에서의 중국의 연구 활동 및 북부 노르웨이로의 중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려 사항을 언급하는 등 중국의 북극 활동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4) 핀란드 북극 전략

2013년 핀란드는 「북극 지역 전략(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13)」을 채택하면서 북극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18] 이 전략에서는 북극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 그리고 국제 협력을 주요 축으로 설정하고, 핀란드의 북극 전문 지식과 지정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을 강조하였다. 특히, 바렌츠 유로-북극이사회(Barents Euro-Arctic Council, 이하 BEAC) 및 북극이사회를 통한 다자협력을 중요시하였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북극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였다.

이후, 2021년 핀란드는 「북극 정책 전략(Finland's Arctic Policy Strategy 2021)」을 새롭게 발표함으로써 2030년까지의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북극 지역의 생태운반 능력, 기후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및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주요 목표 제시하였다. △기후 변화·완화 및 적응, △북극지역 거주민 복지 증진 및 사미 원주민 권리 증진, △북극 관련 전문 지식·첨단 연구, △북극 인프라 및 물류 등의 주요 과제를 포함하였다.[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핀란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2023년에는 NATO에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북극권 내 국경 안정성과 군사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극지의 창

아니라 특히 스웨덴-노르웨이와의 3국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frame)을 설계하는 중이다.[20]

이후 핀란드는 북극 안보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핀란드 북극외교안보정책(Finland's Arctic Foreign and Security Policy, '25.12)」을 새롭게 발표하여 변화하는 북극의 지정학·기후 환경 속에서 핀란드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 정책문서는 2021년 북극 정책과 2024년 6월 발표되었던 외교·안보 보고서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북극을 국제법과 다자 협력에 기반한 안정·평화의 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 확대와 중국의 북극권에서의 활동 확대를 주요 도전과제이자 변수로 지적하며, 북극 정책을 환경·과학 중심에서 외교·안보 차원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웨덴과 함께 NATO에 가입하면서 북극이 사실상 하나의 안보 공동체로 편입됐다는 점을 중요한 변화로 평가했다. 또한, △국제법 존중, △북극이사회의 유지, △원주민 권리 보호,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NATO·EU와의 연계를 통한 북극 안보 협력 강화를 명시했다. 미국-캐나다와의 3자 쇄빙선 건조 협력 협정인 ICE Pact(Icebreaker Collaboration Effort), 극지 연구 및 해양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됐다.[21]

핀란드 정부는 최신의 북극 정책 문서를 통해, 북극의 변화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확대한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북극 관련 지식에서의 우위를 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극 안보 관련 국내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5) 덴마크·그린란드 북극 전략

덴마크 왕국은 덴마크 본토, 덴마크령 그린란드, 페로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페로제도와 그린란드는 각각 1948년, 1979년부터 자치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2011년 덴마크 영토 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덴마크 왕국 북극 전략(Kingdom of Denmark Strategy for the Arctic 2011~2020, 2011)」이 발표되었다. 이 전략을 통해 덴마크, 그린란드, 페로제도 정부는 3자간 조율을 통해 덴마크 왕국의 북극정책을 총 집대성하여 북극의 가능성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

극지의 창

다. 이 같은 목표에 따라 향후 덴마크 북극 지역의 주요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북극개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북극에서의 평화적 협력 기반 마련, △북극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북극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호,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등을 추진하는 중이다.[22]

덴마크 왕국은 냉전 이후 그린란드를 북극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 왔으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덴마크 왕국 차원의 종합적 북극 전략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독자적인 전략 수립 의지에 따라 발표가 연기되었다.[23] 그 후, 2024년 그린란드는 자치 정부 차원의 첫 독립적 그린란드 북극 정책인 「그린란드 외교, 안보, 국방정책 2024-2033(Greenland's Foreig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2024-2033)·을 공식 발표했다.[24]

그린란드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 △원주민 권리, △자원 주권, △기후 대응,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해당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여, 자국의 북극 전략을 통해 국제사회 내 주체적 입지를 강화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함은 물론, 북극을 '저긴장·협력의 공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정책에 담았다. 또한, 핵심적 외교 파트너로서 미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동북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북극이사회, UN, EU를 언급하였고, 각 협력 주체들과의 협력 방향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안보·국방 부문 핵심 과제로는, △주요 인프라의 제3국 소유 금지 및 사이버 방어 강화, △미국 및 덴마크와 협력 강화, △귁(GIUK Gap; Greenland-Iceland-United Kingdom Gap) 해협[25]의 공동 감시 참여, △군사시설의 민간 이중 활용(dual-use) 확대, △북극지역 군사 경쟁 완화를 위한 '평화외교센터(Arctic Peace Center)' 설립 추진, △NATO 내 협상력 강화 및 발언권 확대 등이 있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자치 정부와의 외교적 긴장 완화와 관계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북극 지역에서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 10월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 자치정부와 합의하여, 해상초계기 증강, 합동 북극 사령부 신설, 북대서양 해저 케이블 설치, 북극해 함정 2척 도입 등을 포함한 총 274억 덴마크 크로네(약 4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방위 인프라 도입을 결정하였다.[26]

극지의 창

3. 한-북극 향후 협력 방향과 시사점

앞선 북극권 국가들의 북극 전략 검토 작업을 통해, 북극권 8개국 중 4개국 이상이 새로운 북극 정책을 발표하며 '안보' 그리고 '국방'을 정책의 핵심 기둥(pillar)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왔던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노르딕 국가와 원주민의 삶의 질과 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북극 정책을 전개한 캐나다 등이 안보 이슈를 강조한 대외정책과 비전을 발표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이는 북극 예외주의 붕괴가 담론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각 국가의 대(對) 북극 정책 및 전략에도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북극이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선 공간으로 확실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전환의 흐름은 북극 협력 패러다임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이자 비북극권 국가들의 북극 협력 방향성 또한 재조정 되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경우 2022년 마련된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서는 북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비전통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에 대한 이권 갈등, 북극 지역 군사화 등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안보 이슈를 다루고 있지 않다. 다만, 극지 과학·산업·정책·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정부 부처 간 현안 협의 조정·공동 대응을 위한 '극지정책 협의체'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해군), 해경 등이 극지해역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수습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북극권 국가 정부와의 협의채널 및 매뉴얼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27]

한국이 북극권 지역에 직접적인 군사 방위 투자를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북극권 국가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안보·군사 관련 산업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제안된 북극권 국가들과의 양자협력 모델인 'Arctic-8' 모델을 기반으로, 북극권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 사업을 '안보' 이슈와 연계성이 높은 분야인 조선 및 해양 디지털 기술 분야로 고도화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주목할 만한 북극권 국가 사업으로는 ICE Pact가 있다. 2024년 미국-캐나다-핀란드 3국은 ICE Pact 협정에 서명하여 쇄빙선 협력 노력을 이행하고자 하는데,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국의 조선 산업 지배력 및 러·중 북극항로 협력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28] ICE Pact 협정

극지의 창

내용을 보면, 협정 당사국인 3개 국가의 동맹국, 파트너국과의 협력이 가능함은 물론, 3개국은 북극 운항 쇄빙선 생산에 대한 전문 역량과 경험을 갖춘 조선소로 식별된 국가의 조선 기업들을 협정에 참여시켜 필요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자 하는바[29], 한국의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도모해봄 직하다. 또한, 북유럽 및 러시아는 AI 항법, 해빙 감지, 원격제어 등 자율운항기술을 북극항로 및 연안 항만에 적용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바 러시아, 핀란드(Aker Arctic), 노르웨이(Kongsberg Maritime) 등과 극지형 자율운항선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https://www.climate.gov/news-features/understanding-climate/2024-arctic-report-card-documents-rapid-dramatic-change
2) https://arctic.noaa.gov/report-card/
3) https://www.nasa.gov/earth/arctic-sea-ice-2025-low/
4) https://polarconnection.org/national-security-decision-memorandum-144-december-1971/
5)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of USA, https://media.defense.gov/2019/jun/06/2002141657/-1/-1/1/2019-dod-arctic-strategy.pdf
6) The White House,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22/10/National-Strategy-for-the-Arctic-Region.pdf
7) 한국군사문제연구원, https://www.kima.re.kr/3.html?Table=ins_kima_newsletter&mode=view&uid=1739&s=11
8)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s://media.defense.gov/2024/Jul/22/2003507411/-1/-1/0/DOD-ARCTIC-STRATEGY-2024.PDF
9) Marine Corps Forces Reserve of USA, https://www.marforres.marines.mil/News-Photos/Operations-and-Exercises/2025/Arctic-Edge-25/
10) Aljazeera, https://www.aljazeera.com/news/2025/12/23/trump-says-greenland-essential-for-security-could-he-take-it-by-force
11) Arctic Council, https://arctic-council.org/about/states/canada/
12) Government of Canada, https://publications.gc.ca/collections/collection_2020/rcaanc-cirnac/R5-746-2019-eng.pdf
13) Governement of Canada, https://www.international.gc.ca/gac-amc/publications/transparency-transparence/arctic-arctique/arctic-policy-politique-arctique.aspx?lang=eng
14)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https://www.canada.ca/en/department-national-defence/corporate/reports-publications/north-strong-free-2024.html
15) The Norwegian Government, https://www.regjeringen.no/en/documents/arctic_policy/id2830120/
16) The Norwegian Government, https://www.regjeringen.no/en/documents/national-security-strategy/id3099304/
17) The Norwegian Government, https://www.regjeringen.no/en/whats-new/norway-in-the-high-north-arctic-policy-for-a-new-reality/id3116990/
18) Prime Minister's Office of Finland, https://library.arcticportal.org/1888/1/Arktinen%20strategia%202013%20en.pdf
19)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yment of Finland, https://tem.fi/en/finlands-strategy-for-the-arctic-region
20) High North News, https://www.highnorthnews.com/en/norway-finland-and-sweden-discussing-new-cooperation-structure-high-north
21)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https://julkaisut.valtioneuvosto.fi/server/api/core/bitstreams/ea0b0ac5-2fda-4913-9776-72a1e483e032/content
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 Government of Green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Government of the Faroes Islands, https://library.arcticportal.org/1890/1/DENMARK.pdf
23) Altinget, https://www.altinget.dk/arktis/artikel/groenlands-udenrigsstrategi-er-lige-paa-trapperne-og-baner-vejen-for-kongerigets-staerkt-forsinkede-arktiske-strategi
24) High North News, https://www.highnorthnews.com/en/greenland-new-arctic-strategy-defense-diplomacy-and-peace
25) 귁 해협(GIUK Gap; Greenland-Iceland-United Kingdom 해역)은 냉전기 동안 소련 해군의 대서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북대서양방위 전략의 핵심 통제선으로, 러시아 북방함대가 바렌츠해-노르웨이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해상 회랑이다.
26) High North News, https://www.highnorthnews.com/en/denmark-strengthen-arctic-defense-dkk-274-billion
27)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1067&bbsSeq=81&docSeq=48185
28) Wilson Center, https://www.wilsoncenter.org/publication/getting-points-board-playbook-near-term-improvements-competitiveness-american
29)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public-services-procurement/services/acquisitions/defence-marine/icebreaker-collaboration-effort-pact/memorandum-understanding.html

북극과 사람

북극에서의 DX: 통신 연결성에서 데이터·디지털 문화유산까지

글: 김주형 부연구위원
jhkim7664@kmi.re.kr

▮ 들어가며

북극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인터넷 속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광대한 지역과 혹독한 기후, 제한된 교통망이라는 조건에서 디지털 연결성은 보건, 교육, 안전, 과학 연구, 항해, 비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북극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에게 디지털 전환은 원격의료와 원격교육의 확대, 언어와 문화유산의 기록, 전통지식의 보존, 나아가 자기 결정권과도 연결되는 사회적 변화이다.

북극이사회는 2015년 이칼루이트 장관회의를 계기로 통신 인프라를 북극의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후 북극이사회의 논의는 통신 인프라 확충에서 사용자 중심의 연결성 개선, 데이터 접근성과 공유, 원주민 언어·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으로 확장되어 왔다. 다음에서는 북극이사회 중심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와 정책 동향을 정리한다.

▮ 북극 통신 인프라 논의의 본격화

2015년 이칼루이트 북극이사회 장관회의는 북극 디지털 전환 논의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장관들은 북극 통신 인프라가 공동체 생활, 과학 연구, 항해, 비상 대응에 중요하다고 보고, 북극 통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첫 단계로 환북극 통신 인프라 평가를 수행할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흐름은 이후 북극 통신 인프라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 the Arctic, TFTIA) 활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북극의 통신 문제를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안전·복지·지속가능 발전의 조건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극이사회는 통신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원격의료, 원격교육, 수색·구조, 해상 안전, 과학 관측 등이 모두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통신 인프라는 “경제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회복력과 생존 안전망”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북극과 사람

▮ TFTIA 평가와 '맞춤형 연결성' 접근

2017년에는 TFTIA의 결과물인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 the Arctic: A Circumpolar Assessment」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북극 전역의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격차를 평가하고, 지역별 필요와 기술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해법이 모든 북극 지역에 적용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위성통신, 이동통신, 저대역 통신, 해저케이블 등 다양한 기술 조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7년 페어뱅크스 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되었다. 페어뱅크스 선언(Fairbanks Declaration)에서는 번영하는 북극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극 통신 개선 노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8개 북극권 국가 장관들은 북극 연결성 개선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Improved Connectivity in the Arctic, TFICA)를 설치하기로 했다. TFICA는 북극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통신 수요를 기존 인프라와 비교하고,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산업계 및 북극경제이사회와 협력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나아가, 환북극 차원의 해법을 염두에 두고 2019년 장관회의에 보고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통신망의 유무를 검토하는데서 벗어나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준의 연결성을 필요로 하는지까지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존 인프라 및 신기술과 연결하려는 정책 접근이 나타났다.

▮ TFICA와 위성·해저케이블·모바일 기술 논의

이후 연결성 개선이 보다 실무적인 의제로 발전했다. 북극이사회는 전자통신 서비스가 북극에 사는 사람, 일하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보았고, TFICA는 북극이사회 산하기구, 북극경제이사회, 비상예방·대비·대응 실무그룹, 북극해안경비포럼, 통신기업 및 산업계와 협력했다.

TFICA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기술 중립적·복합적 접근이다. 북극이사회는 북극 연결성 향상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범위가 위성 연결, 이동통신, 저대역 전송, 해저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으며, 지역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극 디지털 전환이 특정 기술 하나, 예컨대 위성 인터넷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북극과 사람

지역 지리·인구 규모·경제활동·공공서비스 수요에 맞춘 인프라 조합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2019년 로바니에미 장관회의에서는 TFICA 최종보고서 「Improving Connectivity in the Arctic」가 승인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 이사회의 논의는 통신 인프라 확충에서, 북극에 거주하고 활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기존 인프라와 비교해 연결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게 된다.

▮ 데이터 접근성과 "FAIR 원칙"의 제시

2021년 레이캬비크 장관선언은 북극 디지털 전환의 또 다른 축인 데이터 접근성을 강조했다. 선언은 급격한 북극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지속적 관측망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북극이사회가 생성한 데이터가 찾을 수 있고(findable), 접근 가능하며(accessible), 상호 운용 가능하고(interoperable), 재사용 가능하며(reusable),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FAIR 데이터 원칙을 북극이사회 차원의 정책 방향으로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도 북극 디지털 전환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북극이사회는 팬데믹으로 대면 회의와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원격·디지털 방식의 협력 필요성을 경험했다. 2021년 장관회의 문서들은 팬데믹이 북극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면서, 건강한 공동체, 공공서비스 접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원격 협력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켰다.

▮ 원주민 언어·문화유산의 디지털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SDWG(지속가능발전작업반) 프로젝트 「Digitalization of the Linguistic and Cultural Heritage of Indigenous Peoples of the Arctic」는 북극이사회의 디지털 전환 의제가 원주민 언어와 전통지식 보존으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북극 원주민의 언어, 전통지식, 문화, 음식 유산을 보존·발전시키고, 이를 지역경제 다변화와 북극 변화 적응의 기반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도 주체는 SDWG, 노르웨이, 러시아연방, 러시아 북방원주민협회(RAIPON)이다.

북극과 사람

▮지정학적 제약에 따른 협력 지속성 유지를 위한 디지털 전환

2022년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극이사회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의제도 일반적인 장관급 협력의 틀 안에서 빠르게 진전되기 어려웠다. 다만 2023년 8월에는 서면 절차를 통한 프로젝트 작업과 의사결정이 일부 가능해졌고, 2024년 2월에는 8개 북극국가가 원주민 상시참여자 조직과 협의하여 공식 실무그룹 회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기는 디지털 전환이 정책 의제의 하나가 아닌, 북극이사회의 협력 지속성 유지를 위한 운영 방식이 되었다. 즉, 북극이사회의 운영 자체가 디지털 방식을 적극 활용하게 된 시기인 것이다. 2024년 북극이사회는 온라인 실무그룹 회의 재개가 프로젝트 수준의 작업을 진전시키고, 보다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나오며

2015년 이후 북극이사회의 디지털 전환 논의는 통신 인프라 확충에서 출발하여 사용자 중심 연결성, 데이터 접근성, 원주민 언어·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정책이 아니라 북극 주민의 삶의 질, 공공서비스 접근, 과학적 의사결정, 원주민 지식 보존을 함께 논의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출처
https://arctic-council.org/news/popular-documents
https://arctic-council.org/news/connectivity-a-lifeline-for-human-activities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server/api/core/bitstreams/08f2791c-5157-48f2-a340-917d1ec3cfd6/content
https://www.uarctic.org/news/2019/5/task-force-on-improved-connectivity-in-the-arctic-tfica-report-improving-connectivity-in-the-arctic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nternational_relations-relations_internationales/arctic-arctique/reykjavik-declaration-2021.aspx?lang=eng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server/api/core/bitstreams/c373f440-367b-4a95-adda-6c6fbcc541fe/content
https://sdwg.org/what-we-do/projects/digitalization-of-the-linguistic-and-cultural-heritage-of-indigenous-peoples-of-the-arctic/
https://arctic-council.org/news/arctic-council-advances-resumption-of-project-level-work/
https://arctic-council.org/news/2026-arctic-council-update/

극지e야기(KPoPS)는
북극과 남극의 사회, 경제, 인문, 자연, 원주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극지정보 포털입니다.

http://www.koreapolarportal.or.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극 및 남극과 관련한 해외 주요 최신뉴스를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MI 홈페이지-정기간행물-극지해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www.kmi.re.kr